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 일시 | 2017년 12월 5일(火) 10:0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PROGRAM

■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인사말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축사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회 이용민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좌장 심재권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발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전전략연구원)

토론 박창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이정철 교수 (숭실대학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민주연구원)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부단장 (외교부)



■ 인사말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i
----------------	---

■ 축사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iii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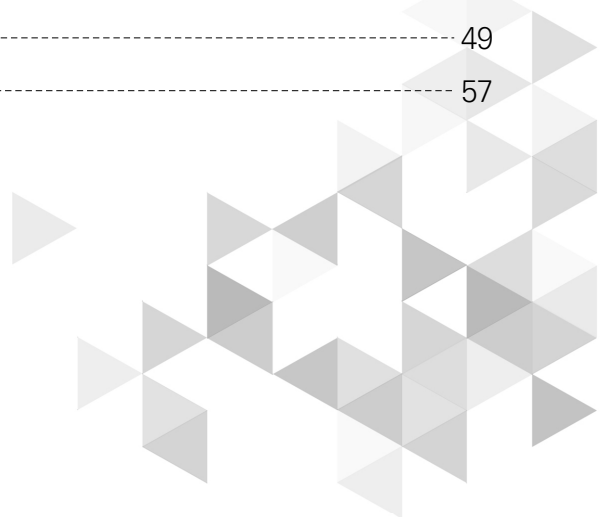
■ 발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	---

■ 토론

박창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19
정성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27
이정철 교수 (숭실대학교)	41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민주연구원)	49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부단장 (외교부)	57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민주연구원은 11월 초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핵심 주제들에 대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11월 29일 신형 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추가 도발이 없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75일 만에 다시 기습 도발을 감행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무분별한 판단으로 인한 북핵 위기가 한반도 정세를 다시 격랑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의 종착지는 평화해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토대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불용하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양한 외교적·군사적 해법을 동반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과 도발을 막아내는 것이 당면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의 북핵 억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공조에 균열이 없음을 강조했고 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방위공약 재확인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를 통한 고강도 압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15일에 열릴 유엔 안보리의 장관급 특별회의를 통해서도 그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복핵 해법의 실행전략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깊이있는 논의가 우리 정부의 복핵 해결방안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좌장을 맡아 주신 심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 주신 조성렬 박사님, 토론을 맡아 주신 이정철 교수님, 박창권 박사님, 김은옥 박사님, 정성윤 박사님, 고윤주 부단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싱크탱크로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5.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을 평가·전망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1월 29일에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11번째 탄도미사일 실험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5년 반의 집권기간 동안 4번의 핵실험과 85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6차 핵실험의 폭발위력은 1차에 비해 최소 50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마이웨이’식 핵무력 도발이 한반도를 거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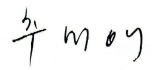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핵 위협에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해법 기조를 공유하는 동시에 군사적 역지력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11월 초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민안전과 국제평화를 훼손시키는 북한의 군사모험적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북핵 해결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실현하는 든든한 정부와 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전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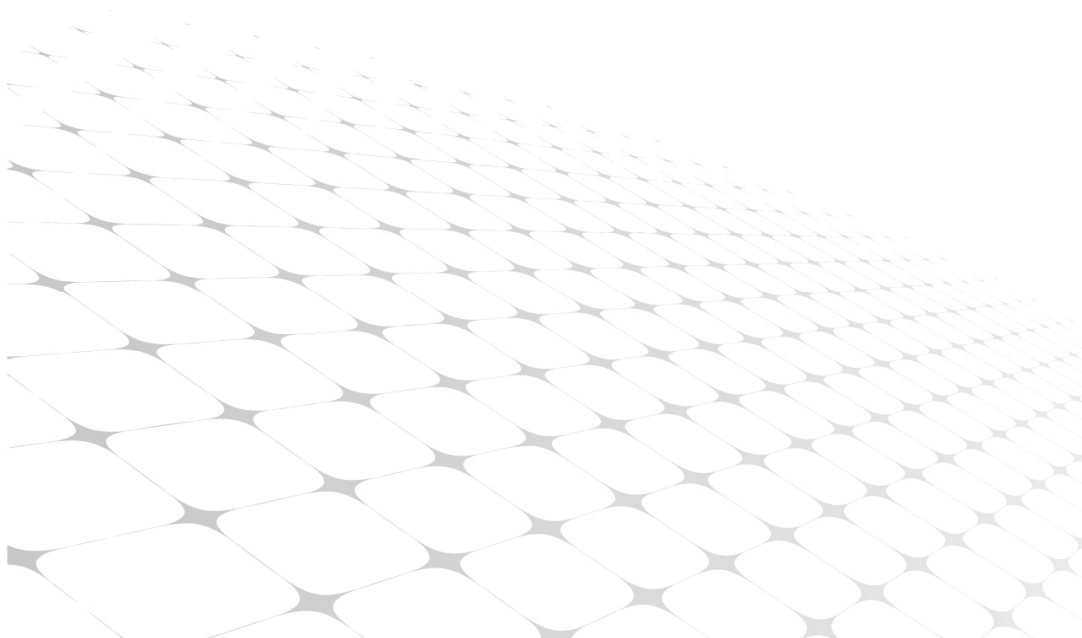
2017. 12. 5.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 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 문제제기: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 2017년 8~9월 '한반도 전쟁위기설'과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 북한의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7.4, 7.28)에 대한 미 국방정보국(DIA) 평가보고 이후 맥매스터 NSC보좌관(8.5)의 예방전쟁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8.8), '군사행동 장착완료'(8.9) 발언
 - 북한전략군의 '화성12형에 의한 궤도 포위사격 방안'(8.9) 발표 뒤에 SRBM(8.26), IRBM 화성12형(8.29) 및 제6차 핵실험(9.3), IRBM 화성12형(9.15) 등 잇단 핵·미사일 도발
 - ※ 북핵실험의 유형은 소규모 Pu 원자핵실험(1차), Pu 원자핵실험(2차), HEU 원자핵실험(3차), 증폭분열핵실험(4차), 증폭분열핵탄두실험(5차) 및 위력 120~160kt의 수소핵탄두실험(6차)으로 구분
-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와 '국가핵무력 완성' 주장
 - 북한은 11월 29일 새벽 고도 4,475km, 사거리 95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주장
 - 국방부는 화성-15호가 사거리 면에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기권 재돌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작동 여부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Ⅱ

역대 북한정권의 혁명정세 인식과 국가전략

1. 역대 북한정권의 혁명정세 인식과 국가전략 노선

- 김일성은 주체적 조건이 ‘작은 나라’이고 정세가 ‘전략적 대치기’라는 인식 속에서 3대 혁명역량(북한, 남한, 국제) 강화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을 내세우며 ‘적화통일을 도모하는 전술적 공세를 시도
 - ‘작은 나라’ 북한이 제국주의 강적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로 ‘전략적 대치기’에서 ‘전략적 수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으로 인식
 - 3대 혁명역량 가운데 국제혁명역량 소멸과 북한혁명역량 약화라는 전략적 수세기 하에서 체제보전을 위해 전술상 △남북, 북·미 대화 및 △핵무기 개발에 착수
 - 김정은도 ‘작은 나라’라는 자각 속에서 국제혁명역량, 남한혁명역량의 소멸하는 등 ‘전략적 수세기’ 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혁명역량의 보존, 체제수호를 최대의 국가적 목표로 제시
 - 김정은 정권의 정착 이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력갱생 및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전략적 대치기’로의 전환을 모색
 -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2017.9.24): “우리의 국가 핵무력.....최종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 ⇒ 북한의 국가전략은 孟子가 제시한 작은 나라 등(滕)의 국가생존법인 국방력 강화(선군노선) 및 주민결속(애민정치)의 방향과 매우 유사
- ※ 『孟子』梁惠王(下): ① 해자를 깊게 파고 성을 높이 쌓으라. 그런 뒤에 ②백성과 함께 성을 지키며 죽는 한이 있어도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다.”(是謀非吾所能及也. 無已, 則有一焉: ①鑿斯池也 築斯城也, ②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為也.)

2. 김정은의 국가전략과 방향전환 가능성

-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제7차 당대회의 의미
 - 정치사상강국(김일성), 군사강국(김정일)에 이어 경제강국(김정은)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목표
 -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일 때 추진한 군사강국 완성과 함께 새롭게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이중과제의 추진을 위해 병진노선 강조

〈그림-1〉 역대 북한정권의 정세판단 및 국가전략



-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대남전략의 방향전환 가능성
 - 시나리오 I: 북한이 미 본토 핵타격 능력을 갖추으로써 미국의 전시지원군을 억제한 뒤,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기도
 - 시나리오 II: 대미, 대남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Two Korea를 실현해 북한체제의 생존을 도모

3.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목표와 군사목표

(1)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적 목표

● 정치적 목표

- 핵억제력의 확보를 통해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고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극복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안정화
- 핵·미사일 고도화 및 실전배치를 통한 ‘군사강국’ 완성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군사적 토대의 구축

● 외교적 목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의 확보

-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의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지 않는 NPT밖의 핵무기 보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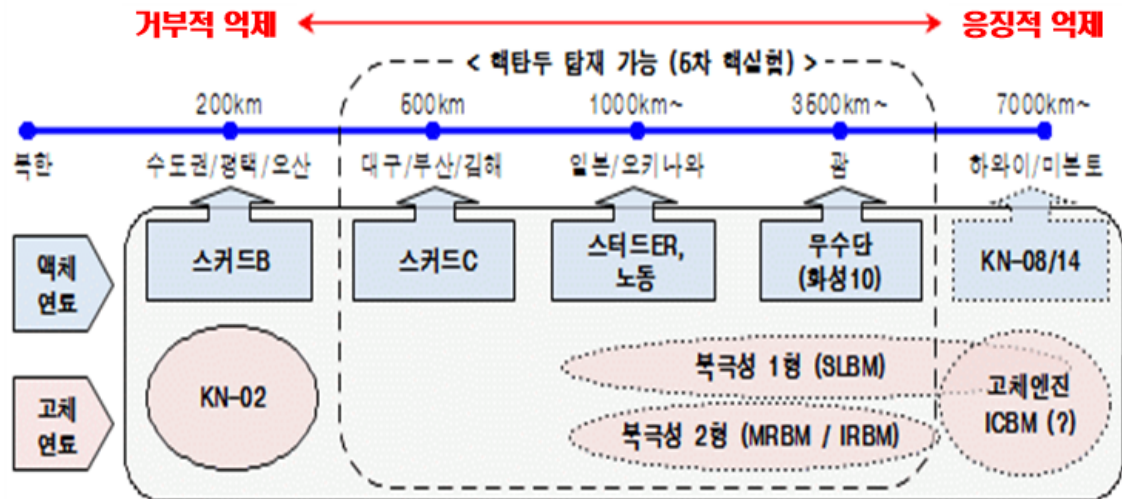
※ 파키스탄 사례: 1998년 8월에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은 대신 미국 등의 쌍무적 제재를 받았지만, 9.11테러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협조를 내세워 제재를 전면 해제

● 군사목표: 반접근지역거부(A2AD) 및 응징적 억제 전략의 완성

- 반접근-지역거부(A2/AD) 억제전략: 유사시에 미군 전시증원전력의 차단을 위해 핵·미사일 공격 대상을 한반도 인근의 미군주둔기지로 확장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및 성능향상에 주력
- 응징적 억제전략: 美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조성

⇒ **Decoupling 전략**: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의 전략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전략

〈그림-2〉 북한판 반점근지역거부(A2AD) 및 응징적 억제 전략



〈출전〉 김동엽, “북핵 미사일 위협과 사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PPT자료, 2017.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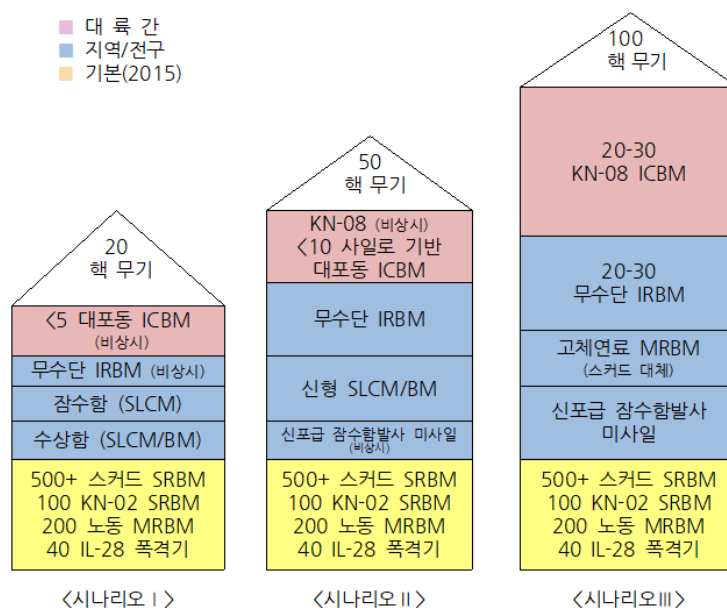
(2) 김정은의 선택 평화론과 대외적 입장

- 김정은의 선택 평화론 : (←김정일의 ‘선군 평화론’)
-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9.7)은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 아태지역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험이 크게 억제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
- 아태평화위원회는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9.3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조선중앙통신』 2017년 9월 7일)
- 첫째, 미국은 수소탄 보유로 달라진 북한의 지위와 무게를 헤아릴 것
- 둘째, 일본은 세계적 군사강국인 북한이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명심
- 셋째, 쥔 것도 변변히 못한 남한은 핵이나 전략탄도로켓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상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 넷째, 주변국들을 비롯한 세계는 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을 위해 투쟁할 것

4. 북한의 새로운 군사전략: 재래식-핵미사일 배합전략

- 기본방향: 재래전과 핵미사일전의 배합 전략 수립
 - 총참모부의 통제 하에 있는 육군, 해군, 항공·반항공군과 더불어 최고사령관의 ‘친솔군종’인 전략군 전력을 배합하는 군사전략의 수립
- 핵 군사전략: 핵·미사일 고도화와 핵전략의 전환 가능성: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 ⇒ 확증보복 Plus 전략
 - 최저 시나리오: 핵탄두 20개로서, 운반수단이 한반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상작전용으로 소수 ICBM만 실전배치
 - 중간 시나리오: 핵탄두 50개로,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되 ICBM 위협이 커져 동북아시아 및 미국에 대한 북 위협이 훨씬 신뢰성을 갖게되며, 일본에 대해 제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
 - 최고 시나리오: 핵탄두 100개로 동북아 및 미국까지 공격목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경우로, 확증보복전략을 넘어 ‘선제사용’ 위협

〈그림-3〉 ‘핵탄두의 양적 증가와 핵전략의 질적 전환



〈출전〉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년 9월, p. 148에서 재인용.

Ⅲ 북한체제의 모순구조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

1. 김정은 북한체제의 3대 모순구조

(1) 북한체제의 3대 모순구조

- 비가역적인 시장화 ↔ 사회주의 계획경제
 - 시장 영역의 확대에 의한 ‘계획-시장 이중경제’의 형성(2002.7.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이후, 소비재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래 불가능한 생산재, 금융, 노동력, 부동산이 상품으로 거래)
 - 사회주의 전략부문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영향력 점증(신흥자본가 격인 돈주가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자금제공으로 큰 돈 벌었으며, 제조와 건설 등 북한경제의 비전략부문에 진출해 상당 부분을 차지)
 - 시장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었으며, 특권적 시장화로 인해 부정부패, 사회적 양극화 폐해 속출(사회계층 재구조화, 외부문화 유입, 신세대 등장, 주민의식 변화/ 상인계층 외에 자본가, 삐띠브루주아, 임금노동자 발생)
- 대북제재에 따른 성장률 저하 ↔ 자강력 제일주의
 - UNSCR 2321호 이후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대외무역량 급감 및 노동력 해외송출 차단 등 외화부족으로 자본재 유입 제한
 - 대북제재에 따른 외환부족 및 전략물자 반입금지로 군수용 부품 및 핵·미사일 개발에 차질이 발생
-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 ↔ 국가핵무력 완성
 - 오랜 경제침체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적 군비로서의 핵무기' 개발에 전념
 -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전쟁 분야에서 전력의 취약성 노정

(2)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과연 효과를 거둘 것인가?

- ‘북한의 비밀무기는 경제성장’ (미 블룸버그 통신, 2017.9.15.)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
 - 김정은 정권 이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2%, 2016년에는 3.9%의 성장률을 기록
-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30)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으로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
 - 2016년 11월 9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채택된 UNSCR2321 (무연탄 쿼터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
 - UNSCR 2371(철광석, 수산물 및 무연탄 전면금지), UNSCR 2375(섬유수출, 노동자해외파견 금지)로 외환조달에 큰 타격
- 북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10.7)의 결정: 장기전 태세로의 돌입

(단위: 억 달러)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경제성장률 (GDP)	0.4%	1.2%	2.1%	-1.0%	3.1%	-0.5%	1.3%	1.0%	3.8%
총교역규모	19.7	22.6	28.6	30.0	38.2	41.7	68.1	76.1	65.5
北中교역액 (비중%)	4.8 (24.4%)	7.3 (32.3%)	13.7 (47.9%)	16.7 (55.7%)	27.8 (72.8%)	34.6 (83.0%)	59.3 (87.0%)	68.6 (90.1%)	60.6 (9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http://dl.kotra.or.kr>)

- 당면과제: △병진노선 지속 추진,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 △당중앙위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
- 조직문제: 3세대인 50~60대 인사가 정무국 및 당 전문부서에 발탁되는 등 세대교체로 김정은 친정체제 재구축

2.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

(1) 압박과 대화: ‘최대압박의 목적은 대화로의 유도’

- 한·미·중 정상들의 ‘북핵 평화적, 외교적 해법’ 합의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외교적 수단일 뿐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6.30)
 - 한·미 정상회담(11.6) 및 미·중 정상회담(11.7)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 미국과 북한의 상호 대화 필요성 인식
 - 미국: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 핵·미사일 완성 및 실전배치 이전에 현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성 고조
 - ※ 로버트 케이츠 前국방장관: 검증을 통한 북한 핵무기 10~20개 동결(7.11, 10.9)
 - 북한: 2016.11.30 UNSCR-2321 이후 UNSCR-2371, UNSCR-2375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으로 경제적 타격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 제재 유예를 얻어낼 필요성 점증¹⁾

(2) 미국과 북한이 제시한 대화 조건

- 미국측이 제시한 대화의 조건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2017.8.16.): “△핵 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동북아안정 저해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의 선행” 제시
 - 매티스 미 국방장관(2017.11.16)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무기의 시험을 멈추고 개발을 멈추며 수출하지 않으면 회담의 기회가 있을 것”
- 북한측이 제시한 대화의 조건
 - 최섉희 외무성 미국국장(5.8.~9): 핵·미사일 중단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대북제재 해제, △북·미평화협정 체결 제시

1) 임수호,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응”, 『미·중 각축시대의 한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 통일경제연구협회 정책워크숍, 2017년 9월 15~16일.

-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2017.10.20.):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공존하는 올바른 선택을 취한다면 출구가 있을 것”
-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11.30):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의 협상에 나갈 것”(12.1 러시아 하원의원단 전언)

(3) 대화국면 전환의 계기와 배경

- 2017년 11월 초[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전후]: 핵무력 완성 직전 북한의 협상력 극대화 시점
 - 계기: 2017.11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 배경: 10.18 중국 19차 당대회, 10.22 일본 총선, 트럼프 미 대통령 동아시아 순방(11.5~14)
 - ※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 행보를 보이고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화성-15형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도 주장(2017.11.30. 러시아 하원의원단 면담 때)
- 2018년 1월 초[김정은 신년사 내용 중]: 핵무력 완성에 기반한 대화
 - 계기: 2018.1.1 김정은 신년사
 - 배경: 북한은 당초 시간표대로 2017년 말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뒤, 우리측이 제안했던 남북대화를 뒤늦게 수용하고 쌍방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 직접대화를 제안하면서 국면전환 시도
- 2018년 3월 말[한미군사연습 종료 뒤]: 안보위기의 진정국면
 - 계기: 2월 9일~3월 25일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3월중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 3월 중순 양회에서 시진핑 2기 체제 출범
 - 배경: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 첨예한 갈등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중국도 시진핑 2기가 출범한 상태에서 핵무력 완성에 기반한 대화를 위해 국면전환 시도 가능성

3. 대화국면이 열린다고 핵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나?

(1)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가능한가

-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려면 북한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연성균형에 의한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을 수용해야 가능
 - 「9.19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안보인센티브로 한반도평화협정,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를 제공기로 합의하는 등 연성균형 방식에 동의
 - ※ 경제-안보 교환(선불제, 후불제)→ 안보-안보 교환(연성균형, 경성균형 방식)
- 북한당국은 2010.1.11 북한외무성의 평화협정 주장을 끝으로 중단된지 5년 9개월만인 2015.10.1 리수용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공식요구
 - 북한 비핵화의 대가였던 한반도(북·미) 평화협정이 이제부터는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의 징표로서 북·미 핵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전략
- 북한당국이 연성균형 아닌 경성균형 방식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고집하는 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난망
 -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경성균형 방식의 안보-안보교환을 위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5개 조건’을 제시
 - ※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공화국 정부성명, 2016.7.6.) : ① 남한내 美핵무기 공개, ② 남한내 핵무기 및 핵기지 철폐·검증, ③ 핵타격수단의 한반도 불반입 담보, ④ 대북 핵무기 위협 및 사용 금지, ⑤ 핵사용권 전 미군의 철수 선포

(2)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 ‘연성균형에 따른 안보-안보 교환 방식’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유도
 - 낮은 수준의 경성균형을 받아들여 북한과 대화·협상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연성균형 방식을 수용하도록 설득·유도
 - 북한과 중국이 제안한 ‘쌍暫停’(쌍방 유예) 방식은 합법, 비합법 논란으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늦게나마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선언한다면 국면전환의 가능성 존재

※ 이도훈-조셉 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도발이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부가(11.17)

●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동시 재개를 통한 시너지 효과

- 6자회담 무용론도 있으나, 기존 회담성과의 계승을 위해 6자회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한 상호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이를 통해 6자회담에서도 한국의 ‘운전자’ 역할이 가능

⇒ 표본겸치(標本兼治)의 추구: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의 병행 추진이 바람직

(3) 어떻게 북핵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

● 기본방향: ‘입구로서의 동결, 출구로서의 폐기’가 가진 의미

- ‘동결 단계’와 남북기본협정(/북·미 연락사무소)의 교환
- ‘폐기 단계’와 한반도평화협정(/북·미 수교)의 교환

● ‘동결’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동결(freeze), 폐쇄·봉인(shut down and seal), 불능화(disablement)

- 「제네바 기본합의」: “북한은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 「2.13합의」: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한다”(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un nuclear facility.)
- 「10.3합의」: “북한은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한다”(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Agre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 ‘동결 단계’란 단순히 가동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폐쇄·봉인과 불능화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

IV 북핵문제의 포괄적·단계적 해법 모색

1. 기본 정책방향: 포괄적 접근에 따른 비군사적 해법

- 기로에 선 남북관계: 핵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인가, 중무장 대치인가
 - 북한체제 약한 고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북한경제의 시장화, △북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
 - 기본정책방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활용,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逆利用 전략, △한국형 大量膺懲報復(KMPR) 능력의 강화
- 남북대화,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쉽게 핵·미사일 포기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손자병법』 모병편에 나오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 삼벌(伐兵, 伐交, 伐謨)에 따른 포괄적 접근이 불가피
 - 벌모(伐謨)는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해 핵보유국 의도를 깨는 것
 - 벌교(伐交)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 핵·미사일 동결을 관리하는 것
 - 벌병(伐兵)은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

※ 『孫子兵法』 謀攻編: 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故, 上兵伐謨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攻城之法爲不得已.
-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삼벌(三伐)과 절전지훈(折箭之訓)
 -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접근방법(三伐)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 병행해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세 개의 화살’에 따른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방법(『北史』 吐谷渾傳)

2. 벌병으로서의 한국형 삼축체계(2K+KMPR)

- 벌병(伐兵)의 접근방식: 억제력 확보를 통한 ‘군사적 균형’
 - 한반도 비핵화 방침의 견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론 또는 우리 군의 독자적 재무장론은 자칫 북한 핵무기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역설을 초래

-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삼축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독자적인 능력(한국형 삼축체제의 조기 구축,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행사) 구비

⇒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이 북한핵문제의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

● 별병(伐兵)의 기본목표: '2K+KMPR' 조기구축과 평화군비통제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형 삼축체제의 효용성을 총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한국형 삼축체제(Kill Chain, KAMD, KMPR)를 조기에 구축
- 한국군의 삼축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을 갖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활용이 불가피
- 아울러,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군비경쟁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군비통제 협상을 병행 추진

● 세부 추진방안

- 응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 북한전략군이 단기간 내 핵 선제사용(first-use)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면한 과제는 북한군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KMPR의 조기 구축이 시급
- 확산통제(Escalation Control)의 체계 마련: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따른 한·미 군당국의 공동조치 외에, 남북한의 군당국 간에도 의도하지 않은 '확전 통제'를 위한 핫라인 설치가 필요
-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조기 전환: 전작권 환수를 위해 먼저 Kill Chain과 KAMD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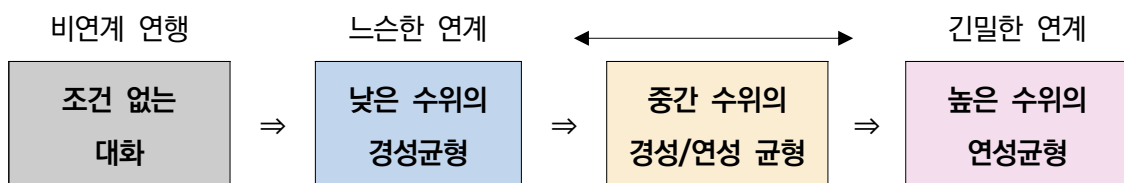
※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Kill Chain과 KAMD의 독자적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통합능력의 구축이 가능²⁾

2) 장영근. "북한 ICBM에 대응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앙일보』 2017년 7월 14일.

3. 별교로서의 ‘압박과 대화의 병행’

- 별교(伐交)의 접근방식: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한 ‘전략적 견인’
 - 대화책: 남북한의 특사 교환, 제3국의 중재 등을 통하여 ‘3단계 연계 방안’에 따라 비확산프로세스 개시 및 군사적 긴장을 완화
 - 압박책: 유엔안보리 결의 및 단독의 경제적 제재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견인
- 별교(伐交)의 기본목표: 연성균형 방식의 안보-안보 교환 유도
 - 한·미가 안보-안보 교환에 의한 북핵 해법을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현재처럼 경성균형을 요구하는 한 외교방식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
 - 북한측 요구대로 일단은 낮은 수준의 경성균형 방식에서 출발하되, 최종적으로 북한이 연성균형 방식의 안보-안보 교환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압박조치 병행이 불가결
- ‘출구론’과 ‘3단계 연계론’
 - ‘입구로서의 동결, 출구로서의 폐기’: △‘동결’과 남북잠정협정, 북·미 연락사무소, △‘폐기’와 한반도평화협정, 북·미 수교의 교환
 - ※ ‘동결’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 「제네바 기본합의」: 동결(freeze), 「2.13합의」: 폐쇄·봉인(shut down and seal), 「10.3합의」: 불능화(disable).
 - 3단계 연계론: 조건 없는 대화재개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한반도 현안과 연계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모색(*① 비연계 병행→② 느슨한 연계→③ 긴밀한 연계)

〈그림-4〉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보-안보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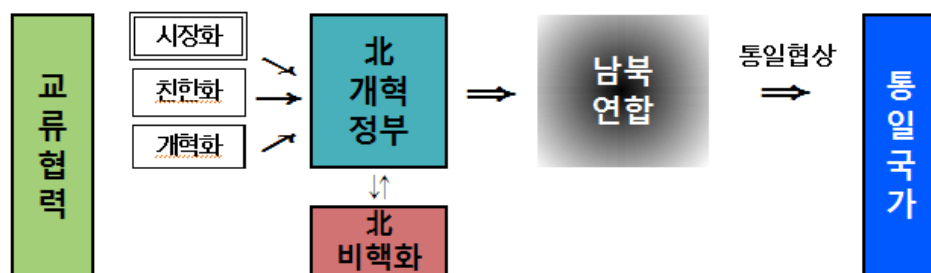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더 이상 ‘경제-안보 교환’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안보-인보 교환’의 가능성이 점차 고조

4. 별모로서의 삼화(三化)전략

- 별모(伐謨)의 접근방식: ‘접근을 통한 변화’
 - ‘트로이 목마’로서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수교를 통한 북한개혁정부 등장의 여건을 조성
- 별모(伐謨)의 기본목표: 삼화(三化)의 실현으로 북한개혁정부의 토대(물적, 인적) 마련과 주체의 형성
 -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집하는 한 북핵해결을 난망하므로, 한반도문제의 최선책은 체제진화(regime evolution)를 통하여 북한 개혁정부와의 협상으로 문제해결하는 것뿐
- 병진노선의 역이용 전략: 상대방의 계락을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장계취계(將計就計)로서의 삼화 전략
 - 김정은은 핵·미사일의 개발과 보유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역이용하여 북한 개혁정부의 토대 마련과 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
- 삼화(三化)전략의 3대 목표와 추진방안³⁾
 - 북한경제의 자유시장화: 북한개혁정부의 물적 토대 마련
 - 북한주민의 친한의식화: 북한개혁정부의 인적 토대 마련
 - 북한엘리트의 개혁세력화: 북한개혁정부의 주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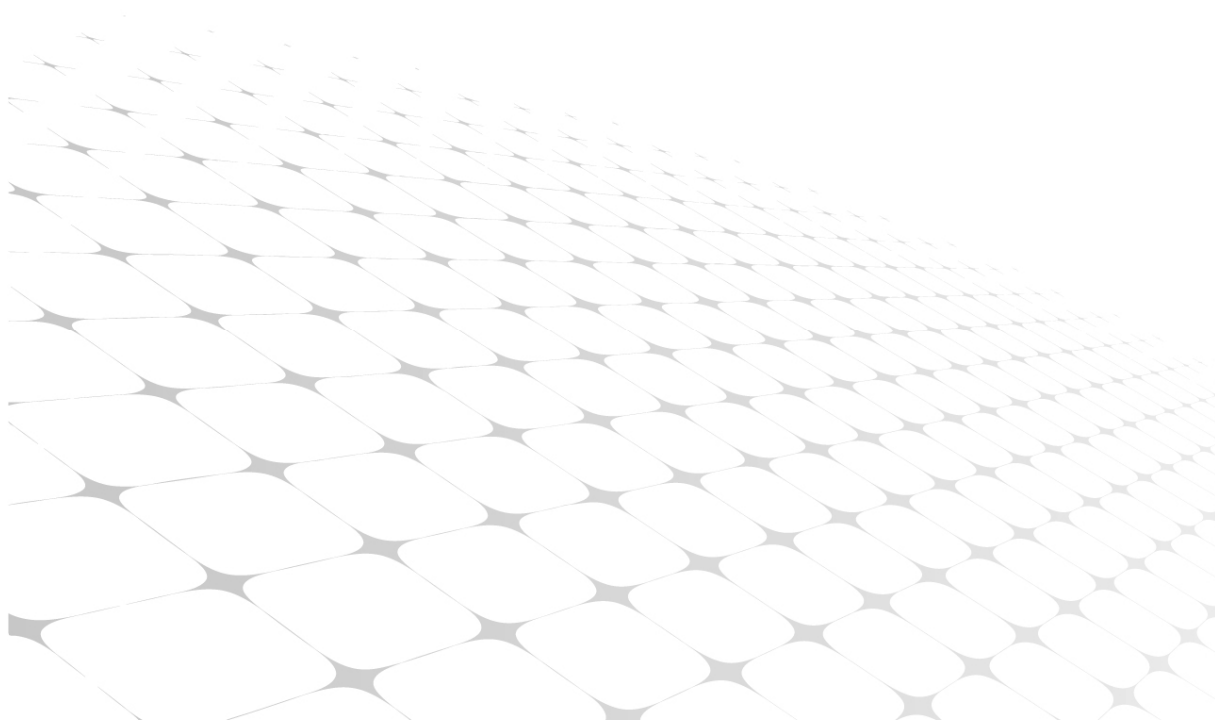
〈그림-5〉 ‘세 가지 변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흐름도



3) 삼화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조성렬 외, 『남북관계의 협력유도방안 연구』(국가안보실 연구용역, 2015년 12월) 참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억제전략

박창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억제전략

박창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 북한의 화성-15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미사일 능력

-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 “국가핵무력 완성…대업,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발표
 - 길이 약 21m(몸체가 화성-14형에 비해 3-4m증가), 2단 추진체(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결합), 직경2m 이상(화성-14형 대비 0.4-0.8m 증가)
-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ICBM) 능력에 대한 평가
 - 사정거리는 정상각도 발사시 약 10,000-13,000km로 미국 동부 연안까지 비행 가능
 - 로켓의 전장과 직경을 증가시켜 추진력을 강화
 - 고각발사로 시험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위한 조건인 재진입체 기술,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고각발사에 비해 정상각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을 위해 많은 압력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높은 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 탄두 복합소재가 요구되나 북한은 아직 이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나 정확한 탑재중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탄두부의 모양을 고려할 때 화성-14형에 비해 큰 부피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북한의 핵투발 수단은 화성-15형이외에도 다양하며,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완성한 것으로 판단
 - 단중거리 스커드, 노동(MRBM)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를 직접 위협하며,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
 -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괌과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
 - 무수단은 16년 4월-17년 3월까지 9차례 시험발사 1회 성공으로 신뢰성 문제 내재
 - 화성-12형은 다수의 시험발사(5월 14일/8월 29일/9월 15일)를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정상각도로 발사시험에 성공하였고 재진입 기술의 발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
(비행거리 약 3,700km로 괌포위 사격시 언급한 사거리 3,356km 이상을 비행)
- 이외에도 북한은 북극성-1/2/3형을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배치
 - 북극성-1형은 2016년 8월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
 - 북극성-2형은 궤도형 TEL에서 콜드런칭(랭발사체계) 방식으로 지상발사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김정은은 실전 배치를 지시
 - 북극성-3형은 2017년 8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는 사진 배경에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형’이라는 문구에서 확인하였으며, 수중 용어 고려시 새로운 SLBM으로 판단
 - 북극성-1형을 시험발사한 신포급 잠수함보다 큰 3,000톤급 잠수함(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미의 킬체인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존하고 제2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음
-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단중거리 고체추진 신형 미사일 개발(은밀성, 신뢰성 향상), 대함탄도탄 개발 등을 추진 예상
- 북한이 ICBM 능력과 SLBM 능력을 확보할 경우, 현재 강대국 마중·러만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

□ 북한의 핵능력 현황과 전망

- 북한은 매 2년마다 약 00kg의 Pu과 연간 약 00kg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8월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였으며, Pu추출에 필요한 사용 후 연료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 확보 가능
 - 2010년 11월 영변을 방문한 미국의 해커박사에게 HEU 생산시설을 공개하였으며 (연간 약 00kg 생산능력), 2013년 11월 영변의 기존 농축시설에 추가로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여 2014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Pu 50여 kg을 보유하고,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 핵무기 1기 제조에 Pu 2-6kg, HEU 15-25kg이 사용된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은 핵무기를 매년 4-8기씩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제공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 최소 20기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북한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4차 핵실험시 ‘수소탄’을 시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6차 핵실험 이후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음을 발표
 - 폭발력 향상 : 1차 핵실험 1kt → 5차 핵실험 10kt 내외 → 6차 핵실험 50kt 이상
 - 핵무기 연구소는 5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핵무기의 대량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음을 주장
 - 6차 핵실험 이후 대륙간탄도로켓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을 선언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수소탄보다는 증폭핵분열 실험일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전문가 다수

□ 북한의 ICBM 및 핵능력 완성을 위한 도발 옵션

- ICBM 정상각도 발사에 의해 ICBM 능력의 완성을 과시

- 고래급 등 신형잠수함 탑재 신형 SLBM(북극성-3형) 시험 발사
- EMP 외기권 폭발시험 및 해상폭발 시험 등
- 수소폭탄 능력 과시를 위한 7차 핵실험

□ 북한의 핵능력 발전, 핵운용 전략, 향후 행보에 대한 주장과 쟁점

-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
- 북한의 핵능력 및 핵무기 운용 전략의 선택방향? 핵전략가들 대부분은 북한이 선제타격, 확증보복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이에 따른 핵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분석 및 판단
- (Viping Narang, Brad Roberts, Paul Bracken, Joel S. Wit, Bruce W. Bennet 등)
 - 확증보복 전략 :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20개 내외)하며,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운용
 -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비대칭적 확전전략 또는 핵무기를 활용한 승리 전략: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100개 내외)하며,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적은 폭발력 핵무기(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핵무기를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 * 북한 핵운용 전략의 쉼법 : 후세인 및 카다피 사례, 한미의 첨단군사능력, 중국의 보호국 역할에 대한 의구심, 의지의 강약점 인식, 벼랑끝 전략의 습성
 - 핵무기 통제는 평시 중앙 통제, 유사시 위임형 통제의 복합적 방식
- 미국과의 핵무기를 활용한 응징보복 등 총력전에 의해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고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decoupling 능력
 - * 미국의 MD능력을 고려하건데 불확실성이 높지만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소억제 능력을 확보 추구
- 북한이 핵무기를 핵그림자 전략을 통해 평시에 한미의 행동을 제한하고 강압하며, 위기시에 자신의 이익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의지의 개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 직간접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는 빠른 시간 내의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여 자신감을 확보하고 →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자신의 핵능력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핵화 협상을 압박하고 유도
- 경제·핵병진노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능력 완성 이후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성공을 위한 외부여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의 억제전략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적 합의

△ 억제전략에 대한 합의

- 억제이론에서 중시하고 있듯이 핵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불식 및 해소시키기 위한 인식의 문제가 가장 긴급요
 -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제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실시
- 억제력은 비용부과, 비용거부, 자제유도를 행사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에 의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 중시
 - 독자적 억제능력 구축을 위한 재래식 3축 억제체제 구축,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체제에 대한 신뢰성 강화
 - 북한의 취약성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및 운용
 - 북한의 자제 유도를 위한 방안 강구 및 노력 중시
 - 핵 위기관리체제 및 대응전략 등 정립, 이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
- 북한 핵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 구축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억제능력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 게임에서도 승리를 추구 필요

△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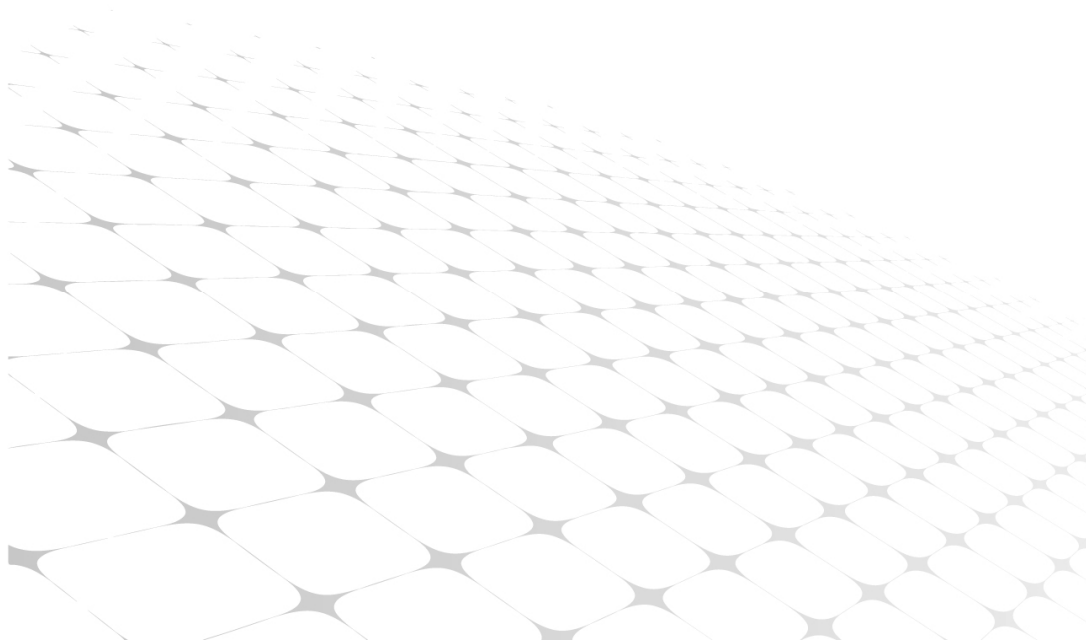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대화접촉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국면 전환, 비핵화

방안 이행이 최선의 방안 → 현재는 실현 가능성 불확실

- 북한 핵상황 변화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하 대북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책 준비 필요
 -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ICBM 개발을 지속하는 등 행동변화가 없는 한 최대의 압박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선택할 가능성
 - 중국은 북한의 핵불용 원칙 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접촉과 대화, 협상을 중시
- 북한의 국면전환을 위한 차후 행보에 대한 준비 및 전략 준비 필요

최근 북핵 정세 특징과 향후 북한 비핵화 대화 호응 및 견인 전략

정성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최근 북핵 정세 특징과 향후 북한 비핵화 대화 호응 및 건인 전략

정성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I 최근 북핵 정세 특징

□ 북핵 정세 특징(2016년~2017년)

- 첫째, 북핵 고도화가 종착의 단계로 진입
-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심각히 손상
- 셋째, 북핵 해결 방식 관련 주요국 간 이해와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
- 넷째, ‘제재국면 장기화’ 추세와 ‘제재 강화-도발 지속’ 악순환의 구조화
- 다섯째, 북미 관계의 지속적 악화로 상호 간 비타협 국면 지속

☞ **전략적 함의:** 단기간 위기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고 타협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난망하며, 한국의 영향력 확대 여지는 점차 축소

□ 북한의 핵무력 평가

-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구축을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핵 기술 고도화는 2018년경, 안보적 차원의 유의미한 핵무력은 2020년경 구축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핵무력은 핵물질 생산시설 확보, 핵무기 완성, 실전운용능력 확보, 핵전략 수립으로 구성
 - 핵 고도화는 이중 핵탄두 및 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의미
- 김정은 정권 6년간 핵무력 구축을 위한 단계적 과업은 크게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핵물질 확보, 핵기폭 기술력 향상, 미사일 능력 향상, 핵태세(전략) 정비 등으로 진행됨.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단계】

1단계 : 2012년~2013년	제도적 준비 및 핵 무력 구축 계획 수립
	- '핵 보유국' 헌법 명문화(2012년 5월), -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발표(2013년 4월)
2단계 : 2013년~2014년	핵무기 고도화 착수
	- HEU(고농축우라늄) 중심 핵물질 보유전략 전환 - 단거리 미사일(SRBM) 성능 개선 집중
3단계 : 2015년~2016년	핵무기 고도화 질적 발전
	- 표준형원자탄(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 기술력 1세대) - 2세대 수소탄(핵융합기술) 기초 기술력 확보 - 준거리 미사일(MRBM) 실전능력 확보
4단계 : 2017년~2018년	핵무기 고도화 완성
	- 수소탄(증폭핵분열탄) 기술력 확보(핵 기술력 2세대) - 중·장거리 미사일(IRBM·ICBM) 실전능력 확보 및 미사일 다종화 체계 구축(SLBM 포함)
'5단계 : 2018년~?	핵 무력 구축 완성
	- 핵미사일 생산 체계 구축 및 대량 생산 개시 - 핵미사일 실전배치 완료 - 핵추진 잠수함 및 전술핵 개발(?)

- 북한의 지난 9월 6차 핵실험과 7월과 11월의 ICBM 세 차례 실험(화성 14형 및 15형)은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은 의미하나, 북한의 주장처럼 핵무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북한의 핵무력은 핵무기의 의미 있는 수량 보유와 이의 실전배치로 오나성되는 것이며, 최근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은 정치외교적적 Bluffing이거나 핵무기 체계에 대한 무지의 반영
- 최근 화성 15형 ICBM 발사는 핵무력 구축의 4단계 후반에 해당하며, 북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단계 무력 구축단계에 진입할 것이 유력
- 이를 위해 화성-14형·15형(ICBM)의 실전화 추가 실험 및 북극성 계열(SLBM)의 다목적 활용 실험이 각각 최소 3~5회 필요하며, 2018년에 이를 집중 강행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북한은 원자탄의 경우 2017년부터, 수소탄의 경우 2018년부터 본격 생산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표준형 원자탄(폭발력 15~20kt) 제작에 3~6kg의 플루토늄과 10~40kg 내외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
 - 수소탄(폭발력 50~1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의 경우 약 1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과 리튬6, 삼중수소 등이 필요
 -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수소탄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경 북한은 원자탄 최대 88개, 수소탄 최대 46개, 도합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
 - 하지만 이는 북한의 비공개 핵물질 생산시설 존재와 생산 핵물질 전량의 무기화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보유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2016년 하반기 표준형 원자탄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과,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이 2017년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
 - 다만 수소탄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용이하며 적은 핵물질로 더 높은 폭발력의 핵무기를 더 많이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수소탄 위주의 핵무기 편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 **전략적 함의:** 향후 2~3년간 북한이 생산하는 핵무기는 거의 대부분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들이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ICBM의 생산 및 실전배치는 빨라야 2020년경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남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은 상당히 높아질 것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 북한과 같은 중소국의 핵전략은 촉매형(catalytic posture), 확증 보복형(assured retaliation), 비대칭 확산형(asymmetric escalation)등 3개로 분류
 -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 여부 등 4개의 잣대에 따라 결정
 - 과거 김정일 시기의 핵전략은 '촉매형'에 가까웠는데, 비록 북한의 부족한 핵능력으로 최소억지력의 달성은 불가능했지만,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렛대 삼아 중국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확보했기 때문

- 즉 대미 핵억지력을 추구하기에 핵능력은 부족했지만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효과를 극대화 했던 것이 김정일 시대의 핵전략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은 현재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비대칭 확산(asymmetrical
escalation) 태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최종 완성을 통해
‘확증 보복형(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임의적인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근거
- 북한이 당분간 최소억지력 확보나 비교적 안정적인 ‘확증 보복형’을 확보하기에는
객관적 능력이 부족하나, 향후 급격히 핵능력을 증가해 미국의 핵공격을 직접
억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북핵 정세 전망

- 단기간 ‘제재 강화-북한 재도발’의 악순환 속에서 정세가 북한과의 타협 모색 보다 ‘강
대 강’ 국면으로 전개가 불가피할 것임.
- 북한은 2018년에도 ‘도발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및 추가 제재결의안에 대한
발발 차원에서 새로운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도발은
북태평양을 겨냥한 ICBM과 북극성 계열(SLBM) 실험, 일본 동경 인근을 관통해
하와이 방향의 서태평양 인근으로 IRBM 미사일 도발 등이 예상 가능
-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은 불필요하나, 북한이 보유한
삼중수소 등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12년), 6차와 유사한 핵실험을 1~2차례 더
강행하는 것을 불 배제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 협의 및 향후 ‘강 대 강’ 국면 과정에서 주요 관련국들의
전략 딜레마가 급속히 심화될 것임.
- 미국의 대중 강압이 훨씬 노골화 될 것인바, 미국은 중국의 제재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미중 무역 문제를 적극 연계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 1~2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

- 미국이 기존 대중·대북 동시 강압 수준을 높임에 더해 우리 정부에게도 훨씬 강경한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저항, 한미 간 갈등(decoupling)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증대
- 특히 북핵 도발의 지속과 미국의 강압전략으로 인해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교안보 딜레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요구 전격 수용 vs 군사적 대응'과 같이 극단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각각의 경우 주도권 약화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라는 증장기 차원의 도전요소에 직면
- 북한은 미·중 협조체제 강화 및 균열시 각각 딜레마 발생

* 미중 협력 강화 시 중국의 대북제재 수준 격상, 미국의 (제한적)무력 강압에 대한 중국의 용인 가능성, 미중 합의에 의한 '강제적 비핵화' 추진 가능성 증대
 * 미중 협력 균열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증대

- 중국은 미국의 대중 강압에 대한 협조 및 비협조 시 딜레마 발생

* 대미 협조시 협력의 강도·범위·수단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며,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도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 증가
 * 대미 비협조시 대중 강압 현실화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증대

-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나 단기간 상호 궁극적 타협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

- 북미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기존 요구수준을 대폭 낮추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
- 미국이 최근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을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서 도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다소 낮추었으나, 북한 입장에서 인센티브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황
- 북한은 2016년 소위 '군축-평화협정' 프레임 제기 후, 2017년 들어 대북적대시 정책(제재 철화·한미연합훈련중단·평화협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이 도발 모라토리움만을 대가로 이를 수용하기는 난망

- 6차 핵실험과 화성 14형·15형 도발로 인해 북핵 위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이로 인해 정세의 구조적 변화가 단기간 급격히 추동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금범 화성 15형 ICBM 발사 등으로 인해 북핵 게임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은 지나친 기우
- 기존 판세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강대국들의 한반도 전략의 근본적 변환도 단기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 북핵 국면에서 ‘게임 체인저’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중국의 대북전략 변화, 한·일의 핵무장, 북한의 대미 2차 타격능력 확보, 북한 내 급변사태 등이 될 것이나, 중·단기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불확실
- 동북아 신냉전에 대한 우려 또한 비현실적인 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강화되지만 북·중 관계 또한 악화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중·러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굳건
- ☞ **전략적 함의:** 북핵 게임에서 북미의 판세 장악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향후 북한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미국이 제시하든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면 당분간 비핵화 타협 국면으로 진입은 난망

Ⅱ 비핵화 대화 유도 및 북한 설득 전략

□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입장

- 북한은 핵무력 구축 후 전략적 편익이 당장 대화 복귀 및 타협을 통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함.
- 미국(혹은 한국)과의 평화협정이나 국제적 보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확실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그 어떠한 흥정에도 교환할 생각이 전혀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안보적 측면에서 ‘이중 잠금 장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즉 핵 무력 강화를 통한 핵 지위국 확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장치(Crucial Key)와 북미평화협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정치외교적 부속·보조 장치(Subsidiary Key)를 통해 대외 및 남북관계 및 정세를 확실히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
- 전자가 없는 후자는 부족하며 전자를 획득하면 후자는 저절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보너스로 평가하고 있을 것
-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력 완성과 핵무기 보유국 지위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당장은 불필요하고, 한국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당분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편익 확보에 큰 기대가 없는 상황임.
 -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실험)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강압 상승과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결의안 채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이에 대한 협력을 예상하고 있을 것
 -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강압에 적극 편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뜻에 역행해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익 제공(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
 - 따라서 상당기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세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이나, 북한이 우리의 협력 요구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 최근 화성 15형 ICBM 발사로 인해, 향후 북한이 평화공세를 본격화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북한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상황은 지금이 아니라 ICBM의 궁극적 완성 및 본격적 생산 이후가 될 것임.
 - 북한의 핵무력 구축 단계와 객관적 기술수준, 그간 북한의 공식적 언급 등으로 추론해 볼 때, 북한 지도부 내부적으로 이번 실험이 궁극적인 핵무력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
 - 이 경우 이번 실험으로 인한 북한의 대미·대남 관계 및 핵무기 효용 확보 전략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한·미 및 국제사회가 제시했던 기존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해 대화로 나올 이유도 없을 것

- 북한 지도부가 화성 15형 발사를 진정으로 핵무력 구축 완결로 인지한다면 이는 정세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바, 북한이 핵무력에 대한 맹신과 과장으로 상당히 공세적인 강압전략을 펼칠 것이기 때문

☞ **전략적 함의:** 당분간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북 관여 정책의 의지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북한이 기대하는 남북관계 편익 확보 또한 실질적 핵무력 구축 후 우월한 교섭지위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할 것

□ 북한의 비핵화 환경 조성 및 대화 견인 추진 전략

- 정세 상 당분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강제 견인 전략(compellence strategy) 추진이 불가피함.
 -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2375호의 지표상 효과가 2017년 4/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북한의 고통이 심화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거부 입장은 상당기간 고수될 것인데, 최소 북한은 2020년 경 ICBM 다수의 실전배치 전까지는 이러한 반(反)비핵화·비타협 강경노선을 지속할 것
 - 따라서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세는 크게 강제적 비핵화, ‘동결-평화협정’ 잠정타협, 북한 장기봉쇄 라는 3가지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
 - 북미 간 상호 요구수준 및 타협 내용의 등가성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비핵화 진척 환경은 2020년 이후 북미가 ‘북핵 동결-평화협정’ 잠정타협(modus vivendi)을 상호 고려하는 경우가 그나마 현실적이나, 이 또한 성사 및 타협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난망
- 당분간 상황 관리에 치중하면서 현실 친화적인 정세 판단 및 전략 구상에 치중해야 할 것인 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정세이므로, 비핵화 진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간접하는 평화체제 진척 노력은 현실적으로 지양하거나 후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 특히 평화협정, 군축, 남북·북미 신뢰구축이라는 ‘적극적’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 진전 혹은 평화체제 로드맵 구축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

- 따라서 로드맵 최종 목표를 북핵 위협 감소 및 차단에 집중한 ‘소극적 평화체제’ 진입 환경 구축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북미/남북미중) 평화협정은 소극적 평화체제 환경이 구축된 이후 적극적 평화체제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다소’ 현실적
- 다만 향후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교섭능력 저하를 일부 차단하고, 평화적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혹은 ‘신경제지도 구상’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유의미
- 특히 평창 올림픽과 관련 한국의 목표로 (先)북한의 참여 유도, (後)남북관계 진전 동력 확보로 두는 것은 정세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전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상황이 엄중하고 단기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어떠한 종류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전략 방향을 확립 및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화 재개 시 우리 정부의 대북 교섭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주도적으로 추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가 인지 및 평가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만 할 것
 - 궁극적 목적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레버리지 강화’라면,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거부(denial)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을 확충하고 이의 신뢰성(북한 입장에서) 확보가 최우선적 전략 방향일 것
 - 부차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남북관계 및 북핵 정세를 주도하고자 설정했던 몇 가지 전략 구상의 변수(혹은 상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만 할 것인데, 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임.

【북한의 전략 구상 상수】

- * 시간은 내 편이며 핵 고도화만 완성되면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받을 것이다.
- * 미 본토 핵타격 능력만 확보되면, 미국이 우리들에 대한 군사적 행동 못할 것이다.
- *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 * 남한이 불필요하나 상황이 악화되면 남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김정은 체제를 결사 옹위할 것이다.

● 우리의 대북 전략적 입지 강화 노력과 동시에 대화 재개 시 북한에 대한 설득 및 대화 유인 논리의 사전 구상이 필요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라고 사료됨.

- 첫째,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북한의 핵무력 구축 및 증강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비핵화 결심과 조치가 늦어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남한 정부가 더 이상 대화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지만 북한의 선택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 둘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장기화 된다면 북한 내 엘리트 통제 시스템 균열 등 반체제 조짐이 증폭될 수 있음을 각인시키고,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핵화 결단을 하는 것이 훨씬 이로운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
- 셋째, 이번 한국 정부는 “과거 북한이 요구해 왔던 ‘행동에는 행동’, ‘말에는 말’의 원칙을 소중히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의 자제와 ‘행동’ 실천에 대한 신뢰를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
- 신뢰가 확보된 북한의 행동에는 비례적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대승적 견지에서의 ‘보상’이 즉각 주어질 것임을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
- 다만 한국(남한 정부)이 단독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현실적 수용이 불가능함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북한의 과잉기대로 인한 부작용 및 역효과를 차단해 북핵 국면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함.

□ 북한의 주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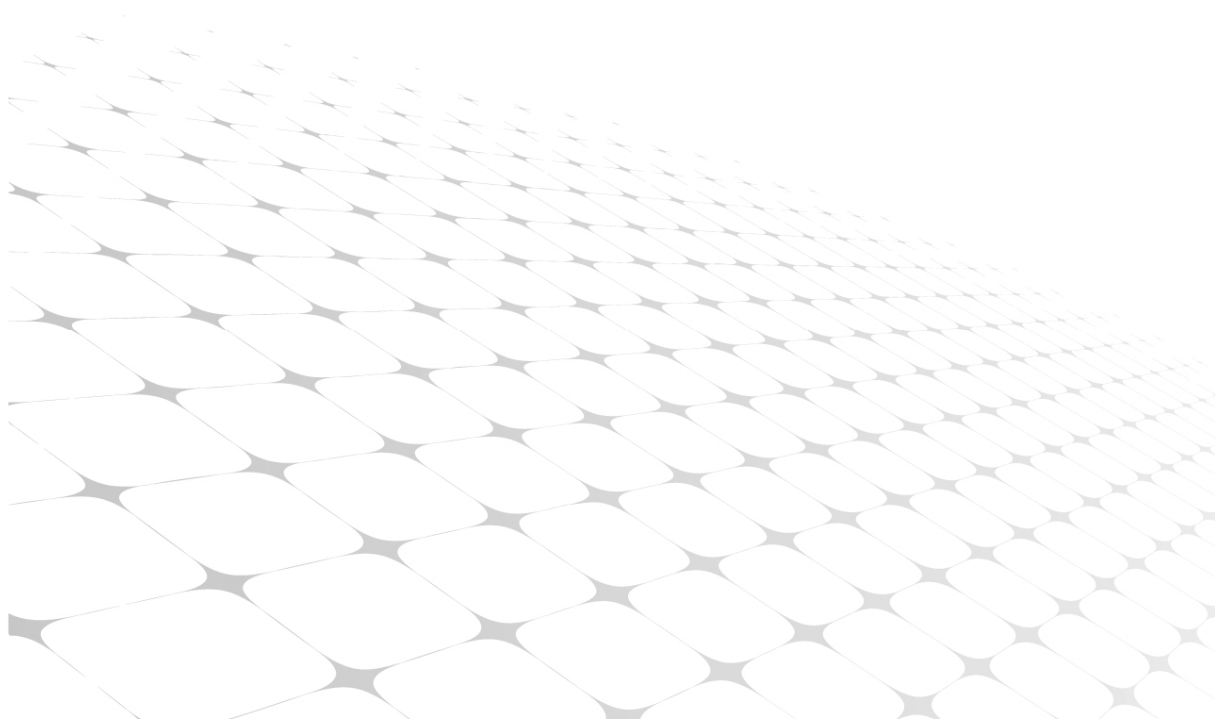
- 핵문제 관련 북한의 ‘남한 소외’ 전략에 대한 대응 논리

-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대남전략은 강압과 관여라는 화전양면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비타협적인 대남 무시 및 소외로 전환했으며,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들과 미국의 문제이며, 남한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엄격히 고수
 - 핵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을 강력히 포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북한의 남한 소외 입장을 변경되지 않을 것
 - 이 문제와 관련해 남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북한의 이익에 직접 타격이 가능한 미국과 중국의 의사결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비핵화 원칙·방향·수단·메커니즘과 관련해 미국의 최종결정은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종속될 여지가 크다는 신뢰성을 북한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
 - 아울러 북한에게는 북핵문제는 세계적 안보 이슈이기 이전에 한국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북핵 문제 어프로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 한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 관련 북한의 반발 대응 논리
- 북한은 기존에 포괄적으로 강조했던 요구 사항인 ‘미국의 대미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대상을 ‘미국과 한국’으로,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제재철회,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반복해서 일관되게 제시
 - 이중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비핵화와의 등가적 교환을 강조하면 교섭 게임에서 방어가 가능하고 북한 또한 가역성 측면에서 내심 이에 대한 교환 가치를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협의 과정에서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 다만 중국이 제시했던 '쌍중단'(freezing for freezing)은 과거 북한이 1.5 track등에서 관심을 표하긴 했지만, 2017년 중반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력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험 유예가 결코 손실이 낮거나 편익이 높은 결정이 아님.

-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은 항상 북한의 실제 도발에 따른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북한 주장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음을 지적해야 하며, 역으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아니라) 전략자산의 동원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해야 할 것
-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
 - 북한이 2015년 연말부터 남한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정세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재주장할 개연성은 배제하기 힘들.
 -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연동되어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며, 한국의 독자적 제재의 완전 해제가 대화 재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임.
 - 선부른 제재 해제에 대한 약속(commitment)은 향후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cheating)에 대처할 수 있는, 혹은 북한의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의 손실을 의미함에 주의
 - ☞ **전략적 함의:** 향후 대화가 개시된다고 해도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인 바, 한국은 대화 재개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제재와 대북 강압책을 '전략적 부담'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이정철 교수 (송실대학교)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이정철 교수 (숭실대학교)

1. 전략적 인내의 실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다. 전략적 인내가 전제하고 있던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명분은 북한의 합리적 광기(rational irrationality) 앞에 무력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낙관주의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옵션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 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 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비용 신호는 신호 분산 효과로 중국의 오인식과 그에 따른 반발만 초래하였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위 입/출구론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 축소와 핵실험 유예를 맞교환하고, 출구에서는 말대 말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한 군축 선언 등을 등가성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문제는 입/출구론을 공동안보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틀을 부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의 수준과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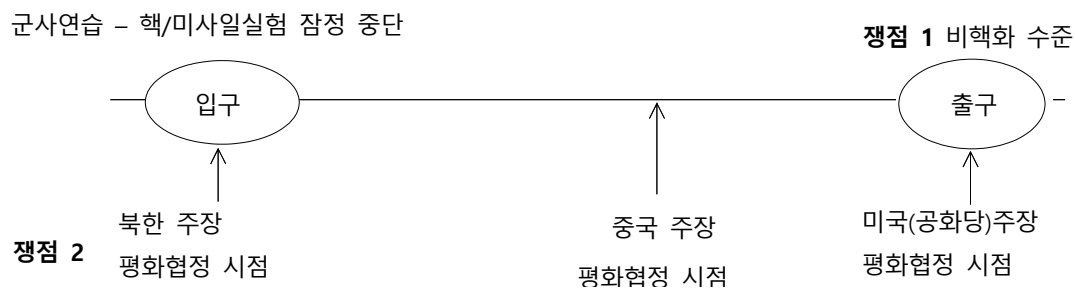
2. 공동안보와 입출구론

- 3가지 대안의 검토와 중국의 입장
 -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
 - 신형대국관계
 - 동아시아판 집단방어체제
 -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 공동안보(common security)체제
 - 입-출구 간의 재난구호 및 군비통제체제
-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관철 경로로 북핵 문제를 활용해왔고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입장은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임
 - 쌍잠정중단과 쌍궤병행론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같은 중국 주도성을 관철하기 위함임
- 법적 프레임이 부재한 분단 상황
 -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이후 불안정한 법적 프레임 문제가 부각
 - 판문점 JSA 상황이나 이번 탈북 과정 등의 위험성
 - 2013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이후 위기 고조 과정이나 2015년 8월 전선지대 준전시상태에 대한 위기 고조 과정 복기 필요
 - 2013년 위기는 미니트맨 3 발사 실험 중단을 계기로 회복(4.16 외무성 성명, 조선신보 4.18 해설 기사)
 - 2015년의 경우 8.25 합의로 과도적 해결책을 마련하였음
 - 어차피 전작권 반환 이후 한반도 군사 체제의 법적 프레임에 대한 정비는 어떤 방향으로든 불가피함
- 핵 문제 해결의 입구가 군비 통제 체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시기부터 법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입구에서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등 명칭에 상관없이 군비통제체제를 규정할 수 있는 평화 관리 체제를 합의해야 함
 - 종전선언, 평화의정서, 잠정협정, 평화조약 등 다양한 명칭 가능
 - 출구에서 최종 완결된 평화체제는 합의(agreement) 수준을 넘어 조약(treaty)의 형태라야 함
- 동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합의하는 데서 말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한 방침일 것임
- 사실상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그리고 출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2단계안을 검토할 때임
 - 2단계안은 캠프 데이비드 체제에서 채용된 것임
 - 현실적으로는 평화협정이 출구 시점보다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음

3. 평화협정 쟁점

● 현재 북핵문제 쟁점의 추론



국가 \ 쟁점	쟁점 1 비핵화 수준	쟁점 2 평화협정 시기	쟁점 3 입출구 과도기 성격
북한(군축협상)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입구 / 정전체제 무효	핵군축협상체제 / 장기
중국(병행론)	비핵화	입-출구 사이(불특정)	모호성전략 / 중단기
미국(先비핵화)	CVID	출구 / 정전체제 유효	병행론일시수용 / 단기

● 정전협정 폐기 시 한국의 이해득실

- 정전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군 대 군의 협정으로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인민지원군은 해체)간의 협정이라는 점임.
- “정전협정은 국가가 맺은 협정이 아니라 유엔군을 대표해 마크 클라크(Mark Clark) 사령관,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인민군사령관, 중국의 펑더화이(彭德懷) 인민지원군사령관 등 3개 군(軍)이 주체가 돼 서명한 것에 주목”
- 따라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이 존재하는 한 유효한 협정이라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가 대 국가의 협상 체제(기본협정 유사협정)가 없다는 단점을 낳기도 함
- 정전협정 폐기와 유엔 사령부 해체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법 대 합법의 문제를 벗어나는 고리이자 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였음
- 현재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대체를 통한 합법화는 북한의 이익이 되나, 후자의 경우 한미동맹의 물리적 힘을 대체할 논리로서는 무의미함
- 2015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이 사실상 북한 핵과 확장 억지 간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호 철수론보다는 상호 인정론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임

북한의 5대 안전담보조건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이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NCND 폐기)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상호검증)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비핵지대화 담보)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소극적 안전보장, NSA)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주한미군철수 선언)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 당사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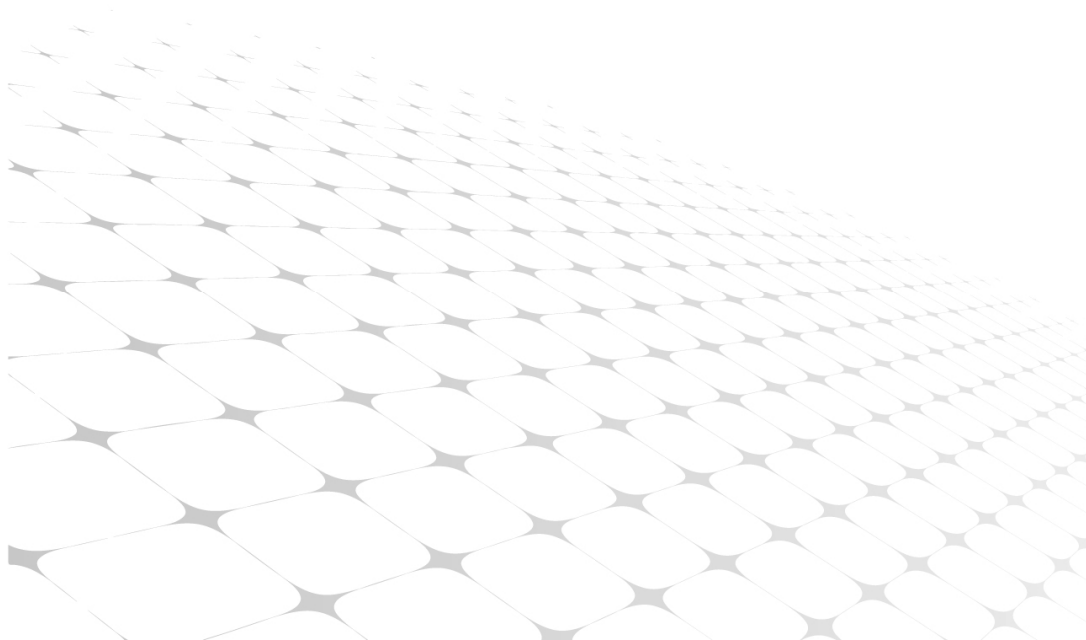
- 사실상 종전 선언은 3-4자 합의에 의해서 대체 가능하나 실질적인 평화 체제는 전작권 반환 이후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
- 2+2(남북 평화 협정/미중 보장체제)라는 보장 체제 방식도 논의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한미일 3각의 협정 체제를 기본으로 시작해야 함
 - 기본합의서를 남북 불가침 합의로 간주하고, 북미 평화 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백안시하기만은 어려움
 - 북 2자회담을 활용한 3각 또는 4각 합의 형식도 고려 대상임
-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의 문제는 사실상 다자체제를 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안보체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상황에 따라서는 평화협정 후 공동안보체제나 공동안보체제 후 평화협정 모두 다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

● 대북 인식론

- 북한이 수정주의 국가(power seeker)나 현상 유지 국가나(security seeker)라는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임
- 전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장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작은 수단마저 활용해야 할 만큼 한반도 상황이 절박하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임

문재인정부의 북핵 해결 추진전략과 과제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민주연구원)



문재인정부의 북핵 해결 추진전략과 과제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민주연구원)

1.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추진환경

- 북한 김정은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핵강국 주장을 본격화하면서 일체의 비핵화 논의를 거부함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은 미북간 先평화협정 체결, 핵 보유국간 군축을 주장하면서 핵보유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함
 - 김정일정권 시기에는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북한의 생존보장, 경제보상 등이 논의된 바 있으나, 김정은정권은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후 핵무기는 더 이상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2016년 미국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정세 재평가와 논쟁이 이루어짐
 - 북한이 2016년 2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조만간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짐
 - 향후 1~2년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완성의 결정적 시기란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요구된 것
-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북 공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임
 - 트럼프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기조 하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미중간 영향력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간 의견 조율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임
 - 트럼프행정부는 대북정책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제시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은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並行)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 옴
 - 한국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

2. 북핵 해결 추진전략

1)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 견지

- ‘비핵평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우리 군의 독자적 3축 체계 구축 등)을 조기 전력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태세를 강화
-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 견지

2)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

-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최종목표로 두고 시급한 북핵 동결에 주력하고 최종목표로 북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 비핵화 합의 이전에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도적 단계들도 필요하며 양자, 소다자 등 ‘탐색적 대화’가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3)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 견지

- 제재·압박과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견인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유지되어야 하나 핵보유를 정권의 정체성으로 확립한 북한정권의 비핵화 유도에 한계를 지니는 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병행 추진
- 핵무기 개발 완성단계에 진입한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효과가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제재와 함께 협상을 통한 직접적 해결 필요

4)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와 더불어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추진
- 북핵문제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장(場)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필요

3. 정책적 고려사항

□ 북한체제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포괄적 관여전략(Comprehensive Engagement Strategy)’ 추진

- 비핵화 협상 추진과 함께 북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관여전략’을 병행, 북한 변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 모색
 - 북핵문제를 단지 비확산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북한문제의 일부로 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
 -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고, 제재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압박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정책을 구사할 것임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과 제재는 다양한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면, ‘관여’에 대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 EU는 대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
 -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과 정치·인권대화를 추진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음
-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제한적 관여를 병행하는 대북전략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핵 해결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함
 -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등 국민적 관심과 동의가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하여 한반도 긴장 국면 전환의 계기 마련
 - 평창올림픽은 동독과 서독이 단일팀으로 출전했던 1956년 멜버른 올림픽처럼 평화올림픽의 상징이 될 수 있음
 - 겨례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등 비정치적인 사회문화 교류사업 복원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기여
 -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대화 복원
 -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병행 진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을 개방화, 시장화 확대 등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전략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것임

□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 마련 위해 노력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인 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대북제재를 지속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재만으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주지
 -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견인한다는 정책 기조 견지
-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ICBM 개발에 집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와 함께 일정기간 갈등 국면 후 미국과의 물밑 대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당분간 북미간 대결 국면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초 북미간 전격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내에서도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전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될 수 있음
 - 현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차원의 ‘탐색적 대화’가 적극 모색될 필요
- EU, 호주, ASEAN 국가 등과의 대북 공조 매커니즘을 확대하여 비핵화 대화 견인을 위한 정책협치의 장으로 활용
 - 특히 EU는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북 회담 제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북한문제에 있어 전략적 협력 가능한 대상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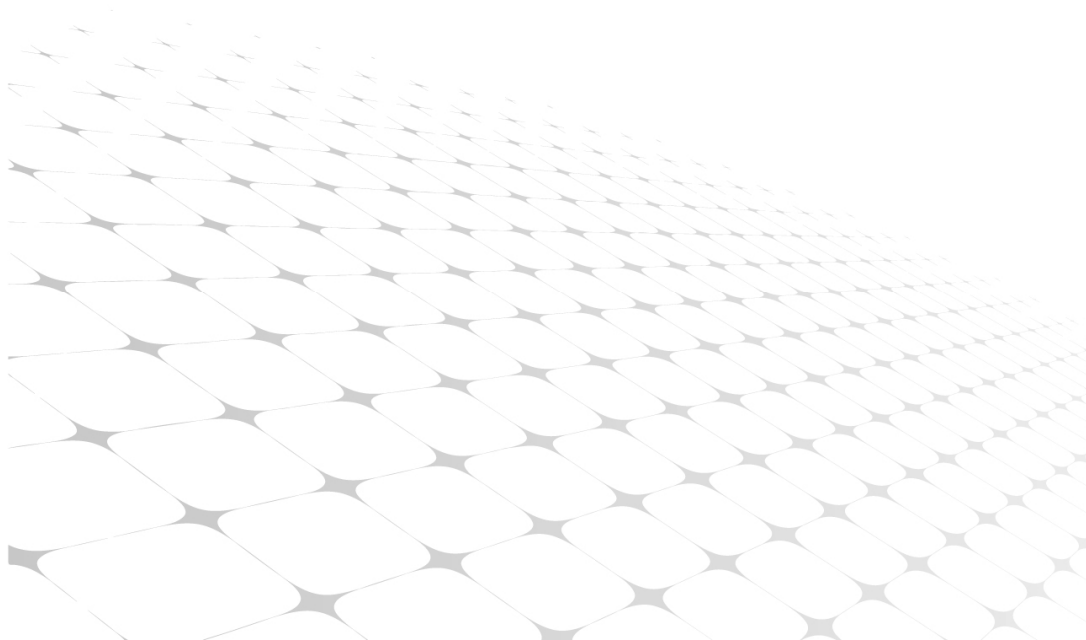
- 유럽연합 7개 국가가 북한대사관을 갖고 있는 바, EU와 개별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축적한 경험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

□ **미중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북핵 해결의 관건의 시기인 바, 미중과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능동적 역할 추진**

-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4월 ‘최대의 압박과 관여’ 발표시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히는 등 북핵문제를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현 시점이 북핵 해결의 적기임을 주지
 - 중국 역시 19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주석이 국내정치적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성공한 바, 그동안 보류했던 외교안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주변국 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미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제재-협상의 시퀀스를 준비하고,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의 공유영역을 확대할 필요
 -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한미, 한중간 전략대화 등을 통해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
 -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범위의 명료성, 합의 이행보장의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
 -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합의가 긴요한 상황인 바, 12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의 공감대를 확대
-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업체제 강화
 - 북핵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역량의 결집 필요
 -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각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고윤주 북핵외교기획부단장 (외교부)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